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2.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7)
3.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5.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6.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7. 乙은 甲이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8.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9.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
10.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 (11~15) 甲, 乙, 丙이 1/3지분 씩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乙, 丙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11. 乙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12. 乙은 모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3. 만일 甲이 乙과 협의하였다면 특정부분의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다. ()
14. 만일 甲과 乙이 협의하여 이를 A에게 임대차 해주었다면, 이에 동의한 바 없는 丙은 A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15. 위의 14 지문에서 丙은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O)
2. (O)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
3. (X)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4. (X)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O) 乙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6. (O) 상대방인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 (X)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라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8. (X) 무효인 중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9. (O)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
10. (X)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이다.
11. (X)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목적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X)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13. (O)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부분의 배타적점유를 할 수 있다.
14. (X)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는 적법하므로 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15. (O) 과반수지분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바가 없다.